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정부가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 3월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시행 7개월만에 무차별적 시설 양육 조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부족을 들어 잇따라 정책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혼란이 빚어진 탓이다.

이 정책은 지난 3월 도입 당시부터 지자체의 반발을 사왔다.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40~50%의 부담을 떠안긴 탓이다.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정부가 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정책의 집행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2~3할 '무늬만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재정과 사무의 이양을 추진해왔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2할 자치' 수준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72대 28로 3할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방사무 비율이 더더욱 줄었다. 더욱 큰 문제는 사무를 이양 해주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지방분권' 개헌 미룰 수 없다

떠남기고 있는 점이다. 사무와 재원 배분이 중앙정부와 국가 위주로 흐르고 있어서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이나 수십 가지에 달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SOC 유치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들이 중앙정부가 내놓는 틀에 맞춰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다. 그 안에서 지역의 경제구조나 특성을 고려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사업은 지원액도 쥐꼬리다.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은

이 경쟁에서도 불리한 수밖에 없다. 이는 되레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 균형발전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날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고도(高度 비관)'으로 가는 장애를 겪고 있다. 국토 면적의 28.5%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2.2%, 제조업체의 57%가 몰려 있다. 일극(一極) 집중이다.

반면 지방은 영양실조로 활기를 잃어 홀로서기는 연감생심이다. 수도권의 팽창과 지방의 저(低)발전은 성장 지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불균형 발전전

략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에 맞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지난 9일 광주시와 대구시, 대전시 등 내륙 3개 도시가 공동토론회를 열어 연대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축이 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준비위원회'가 창립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은 앞다퉀 지방

을 돌아다니며 수없는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지방을 살릴 후보'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중앙 위주 행정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 공화국'임을 실감한다. 날이 갈수록 공룡이 되어가는 수도권과 발전 지체를 빠저리게 체감하는 지방의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해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미약하게만 느껴진다. 3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남북관계 등 거대담론에 매몰되어 있는데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탓일 게다.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는 길이다. 뿌리 깊은 중앙집권의 역사와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분권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선진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정책연합과 공동도 서둘러야 한다. 대선을 앞둔 바로 지금이 적기다.

(정주부장)who@kwangju.co.kr

시 설

장 교육감, 위기의 광주교육 직시하라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이 특혜 합격자 바꿔치기로 법원 판결을 앞뒀던 시교육청 인사과 직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학부모 단체에서 비난 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1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성적조작 교원 채용비리는 그것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교육감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학생들이 보고 뭇배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도 15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탄원서 제출은 잘못된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과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번 성적 조작 채용비리는 그것도 교

육청이 모의하고 조작했다는 게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씨와 전 인사과 직원 이모씨가 사립 학교 특채과정에서 전교조 교사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평가표를 조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 청렴을 그렇게 강조해온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탄원서까지 냈다니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광주교육은 인위적인 변화의 기류 속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력'의 위상 추락 우려와 사학과의 갈등, 고교 배정방식 번복 등 내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장회국 교육감 취임 이후 일선 학교 교장들의 75%가 광주교육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원인이 없고, 소용이 일방적이라는 데 있다.

당부하건대, 장 교육감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심부름 건 아닌지, 자신들만의 교육개혁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내일의 광주교육을 위해서 말이다.

교실서 '생일빵 동영상' 학교 측은 뭘 했나

최근 목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수험생이 유튜브에 올린 '생일빵 폭행 동영상'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5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1분30초 짜리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 10여 명이 교실에서 한 학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집단폭행을 촬영한 것이다. 실제로 이 '생일빵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오자 순식간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이 목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홍어의 도시', '역시 전라도' 등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단순한 생일 이벤트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생일빵' 폭행이 발생한 곳이 신성한 교실이라는 점이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건물 옥상이나 공원 등지

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교실에서 버젓이 벌어진 '생일빵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건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더욱이 폭행 장면을 촬영할 때까지 학교 측의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허술한 학생관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경찰은 '생일빵' 이벤트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여부를 더 조사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경위를 면책해 밝혀야 한다. 학생들은 그 어떤 폭력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일선 학교들도 제2, 제3의 '생일빵'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도 강화하는 한편 의식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목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그릇된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無 等 鼓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무신론자였다. 최근 온라인 경제사이트 이베이에서 경매에 붙여진 그의 편지에는 평소의 무신론적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숨지기 1년 전인 지난 1954년 1월께 철학자 에리 구트킨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는 "나에게 신(God)이라는 단어는

생의 황혼기인 74세의 나이에 기독교에 귀의했다.

'사랑하는 딸의 시력을 되찾게 해준다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딸이 투병생활 끝에 결국 숨진 뒤에도 그는 기독교에 남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노아와 홍수를 주제로 열린 '성서 스토리텔링'에서 "노아의 방

주를 종교적으로 보면 그가 막힌 이야기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좋은 이야기가 우스워진다"며 성경을 과학적 담론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다 알아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야 하지는 않는다. 아인슈타인에게 종교를 말하게

했어야 되겠는가"라고도 했다. 동·서양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마저 신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한 정된 지성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구약성서 속 노아를 두고 "노아가 진짜 사람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는 정도다. 하지만, 그는 인



아인슈타인의 편지

해시켜 되겠는가"라고도 했다. 동·서양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마저 신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한 정된 지성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구약성서 속 노아를 두고 "노아가 진짜 사람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는 정도다. 하지만, 그는 인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은평칼럼



임 명 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초고령사회개념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는 2030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전남은 초고령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 건강에 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생계수단이 막막하다. 규칙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연금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매월 16

만~19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신의 질환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한다면서 오히려 지급을 삭감하거나 줄이고 있다. 특히 4대강과 같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지 않은 것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진 것이 사실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경험하여 보면,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 관절염과 소화불량, 그리고 감기와 같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노인들의 의료기관 방문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혜택을 누리야 할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웰빙건강 1.0 시스템

웰빙건강 2.0

이였다면, 이제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웰빙건강 2.0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약물의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찾아가는 건강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최근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별로 가족별

은평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마을개발사업



허 을 석

풍성한 수확이 기대되는 가을이지만 올해 농촌 분위기는 절망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이은 가뭄과 태풍에 농작물을 잃기도 했고, 일손마저 부족해 수확과 내년을 위한 대비는 영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기 때문이다.

농촌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어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체 경지 169만8000ha 가운데 휴경농지가 5만4600ha로 휴경률이 3.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0.9%에서 2005년 2.4% 2010년 2.9%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경농지뿐 아니라 공동화현상 또한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따르면 2010년 전남지역 농어촌 과소화 마을은 11.7%에 이르고 있다. 자매결연, 체험활동 등 도농 교류에서 소외된 채로 소득여건과 공공서비스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된 채로 교통인프라나 도농 교류 활동, 생산자 단체 구성 등의 활동이 저조해 소득여건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농어촌 과소화마을의 심각성이 더 커다라 하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 단위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동력을 찾아 고령화와 공동화가 진행중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마을을 소권역단위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등의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사업과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통해 농어촌 변화의 원동력을 마을에서 찾는다.

각 권역별로 상품성과 시장성,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내어 지역목표를 정하고 주민과 자치단체, 지역개발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

업이다.

우리 순천, 광양, 여수지역은 10개소에서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상항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주민이 장기비전 수립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 개발은 소득향상과 정주 공간 개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부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공동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지금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점이다. 또 지금까지는 실종신고도 꽤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할 경우 구·군청이나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견 즉시 실종정보를 확인해 곧바로 보호자 품에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다. 광주 도심지역은 별 문제가 없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데 경찰관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장비 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어린이어를 둔 일부 부모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등록해야겠다고 생각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이 터지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홍보 대책도 마련돼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다. 가급적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가 같이 다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름표나 인사가 능한 표식을 지니게 하고, 자녀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행선지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꼼꼼히 알아두어야 한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도 중요하겠지만, 더 이상 부모를 잃고 헤매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이 더욱 더 필요한 때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淳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기11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다시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